

기부문화 불신에 소규모 복지시설 된서리

보육원·그룹홈 운영... 광주·전남공동모금회는 전년과 비슷

이영학 사건 여파에 기부 기피...기금 운영 투명·공공성 높여야

“갑자기 후원을 중단하거나 전화로 후원을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최근 광주시의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 온정이 끊겨가고 있다. 예년 같은 성금과 기부 물품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독지가들의 발길이 줄었다. ‘이영학 사건’ 등의 여파로 기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약정기부자를 제외한 신규 기부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대형 모금단체와 달리 소규모 복지시설은 그야말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광주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은 1개소당 30명~70명 아이들이 대규모로 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을 웃도는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다. 5~7인의 소규모

단위의 시설인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예외는 아니다. 12월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아동양육시설은 9개소, 공동생활 가정은 23개소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외부 기부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부자 측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운영 구조를 갖고 있다.

A아동양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의류 등 물품 후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은 20% 이상 줄었다”면서 “독지가의 성금이나 물품에 의존하는 소규모 복지시설이나 아동생활가정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B시설 관계자는 “운영자금이 빠져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아이들에게 해줄 게 없어 마음 아프다”며 “원생들 입원 내의는 고사하고 장갑과 모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복지시설이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부금 부당사용 등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기금 사용에 있어 공공성을 얻고 있는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우 기부 기피 현상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7일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광주는 모금 25일째인 지난 14일까지 이날 38.4도, 모금액이 19억92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인 17억82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전남의 지난 13일까지 모금액은 지난해(18억7300만원)와 비슷한 18억6500만 원을 기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기부 포비아’ 현상에도 모금이 순조로운 것은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분과실행

위원회에서 배분된 성금을 심사하고 운영 위원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등 투명하게 성금이 운용된다.

또한,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분사업 평가위원이 지원 사업에 대한 감시와 회계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감사,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시민감시위원회, 내부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부금액의 사용처는 연간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부터 사업별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사용처를 공개하고 하고 있다”면서 “기부문화를 왜곡하는 사건들이 울해 많았다. 시민들이 감시와 홍보 역할을 충실히 하는 만큼 믿고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기부를 이끌어 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성금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선처 받은’ 아동학대 아빠들

광주지법, 무죄·형사처벌 면제 잇따라

어린 자녀들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빠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집에서 아들(7)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네 번 때리고 2016년에는 옥살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상해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어린 남매를 때리고 옥살이를 한 아빠에게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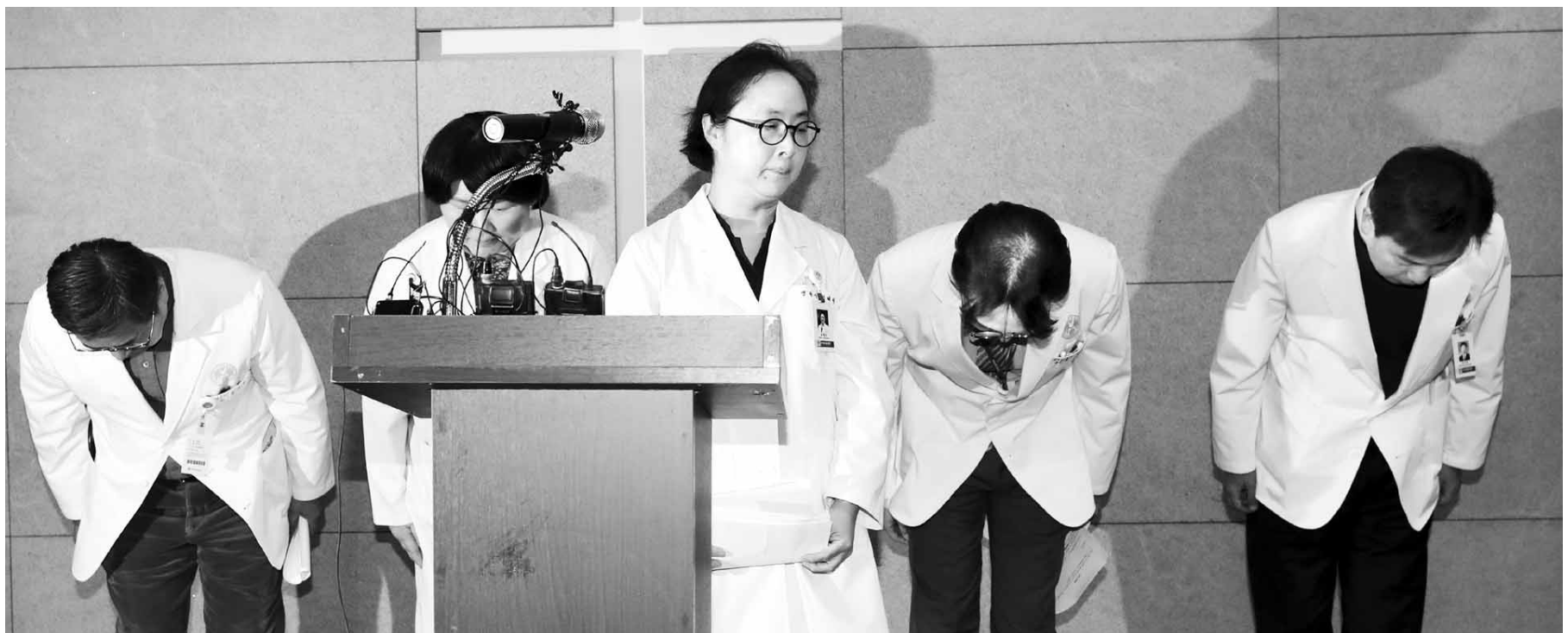
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아동보호 재판부로 송치했다.

B씨는 2016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딸(8)과 아들(5)을 깨워 옥살하며 등을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렸다. 또 방문을 발로 차고 꽃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습 폭행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신체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사건 이후에도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아동보호 절차상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 양육 의지·능력, 피해 아동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7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정혜원 병원장(맨 앞) 등 관계자들이 전날 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브리핑한 뒤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서 신생아 4명 잇따라 숨져

경찰 부검 의뢰 수사 착수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께부터 밤 10시 53분께까지 양천구의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

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밤 11시 7분께 “중환자실이다. 아이 2명이 (상태가) 이상하다. 4명의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 이상하다”라는 신고를 받고서 출동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4명은 이미 숨진 뒤였다. 병원 측은 미숙아 4명이 이상 증세를 보

여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했다. 유족들은 신생아들이 배가 불룩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숨진 신생아 치료와 긴급 조치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신생아들의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승용차 넘어져 가족 6명 부상

17일 오후 3시 40분께 전남 해남군 황산면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차에 탄 가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으로 미뤄 눈이 얼어붙은 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임신하지마” 부당지시한 박물관장 징계는 정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패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전 박물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김모(여·53)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한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박물관에서 일할 동안에는 임신하지 마라”, “치마를 입어라”를 비롯한 성차별적 발언과 “꺼져”, “도 말지 마” 등의 폭언을 하고, 남자 직원의 영덩이 부분을 손으로 치는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문화재단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문화재단은 감사를 통해 김씨가 이 갈

은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김씨는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며 재심 당시 처음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직원의 고충상담 민원으로 당시 직원들에게 ‘박물관에서 일할 동안에는 임신하지 마라’, ‘치마를 입어라’를 비롯한 성차별적 발언과 ‘꺼져’, ‘도 말지 마’ 등의 폭언을 하고, 남자 직원의 영덩이 부분을 손으로 치는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문화재단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문화재단은 감사를 통해 김씨가 이 갈

성매매 단속에 11층서 도주...5층 가스배관에 매달려있던 구조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놀란 40대 성매수남이 건물 11층에서 외벽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도주하던 중 5층 가스배관에 매달려 있다 극적으로 11층에 구조.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14일 밤 10시10분부터 10시50분까지 40여분간 광주시 서구 치평

동 모 오피스텔 5층 외벽 가스배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구조해달라”고 직접 119에 전화를 건 A씨는 경찰에서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될까봐 두려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다 5층 간판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